

# 2016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와 의의

■ 김 성 응\*

선진경제 국가들의 모임에서 개도국의 가입 유도로 외연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디지털경제의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과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 고위급 모임인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35개 회원국<sup>1)</sup> 및 초청된 비회원국들은 디지털경제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결과물로 장관선언문(칸쿤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인터넷 개방성, 디지털혁신, 융합, 사물인터넷, 전자상거래, 소비자 신뢰, 일자리, 기술 등 ICT 분야의 핵심 주제에 대한 현황 및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장관선언문에서 혁신, 성장, 사회적 번영을 위한 디지털경제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세부조치로서 9개의 결정사항을 선언하였다. 이에 보고는 OECD 장관회의 개최 경과, 장관회의 논의결과 및 장관선언문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이전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향후 OECD 내에서의 업무방향 주도 방안 및 우리측 입지 강화 전략 등 장관회의를 통해 도출 가능한 의의를 살펴본다.

## 목 차

- I. 서 론 / 2
- II.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개요 / 3
  - 1.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개요 / 3
  - 2. 디지털경제장관회의 추진경과 / 7
- III.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 / 9

- 1. 주요 패널 논의내용 / 10
- 2. 칸쿤선언문 채택 / 16
- 3. 한국의 정책 성과 / 24
- IV. 결 론 / 2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436, woongnice@kisdi.re.kr

1) 최근 라트비아의 OECD 가입('16. 6. 2)으로 전체 회원국이 35개국으로 늘어남.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latvia/accession-latvia-invited-to-join-oecd.htm>)

## I. 서 론

오늘날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지않는 삶의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디지털경제는 세계경제 전반에 확산되어 있다. 세계인구의 40% 이상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2016년 글로벌 인터넷 트래픽은 1 제타바이트 이상으로 예측되는 등<sup>2)</sup>, 디지털화로 인한 디지털경제의 확대 및 디지털경제의 경제사회에의 기여는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디지털경제의 확대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세계 40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 인터넷 연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sup>3)</sup>, OECD 회원국 중 몇몇 국가는 기업의 온라인 판매 비율이 10%도 안 될 정도로 OECD 내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참여 격차도 큰 상황이다.<sup>4)</sup> 이에 디지털경제의 발전 및 도전과제 등 디지털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파악 및 국가들의 디지털경제 전략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멕시코 칸쿤에서 6월 22일부터 이틀간 ‘디지털경제- 혁신, 성장 및 사회적 번영’이라는 주제 하에 디지털경제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 on the Digital Economy, 이하 칸쿤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장관회의는 멕시코 정부 주최로 OECD 회원국 및 초청받은 비회원국을 포함한 41개 국가<sup>5)</sup>의 정부, 기관, 산업 및 학계 전문가 1,200여명이 참석하였다.<sup>6)</sup> 참가자들은 이해관계자 포럼, 장관회

2) CISCO(2016), global infographic 2nd slide.

3) ITU(2015), p.42.

4) OECD(2015), pp.47~48.

5) 기존 34개 OECD 회원국 및 6월 신규 가입국인 라트비아, 그리고 초청받은 6개 비회원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이집트,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홈페이지(<https://www.gob.mx/economiadigital>)

6) 칸쿤장관회의는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 참고로 1회 오타와 장관회의는 41개국 700여명, 2회 서울장관회의는 70개국 2,278명이 참가. 남상열 외(2008). 김성웅(2013). OECD 계시판(OLIS) 행사관리시스템(EMS) 참고.

의 전체 패널세션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현안을 논의하였고, 결과물로 디지털경제에 관한 장관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Digital Economy, 이하 칸쿤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칸쿤선언문은 8년 만에 열린 장관회의의 결과라는 상징성과 함께, 인터넷경제에서 좀더 포괄적인 디지털경제의 시대로 이어지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OECD 및 국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및 디지털경제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 결정사항을 담고 있어, 정부 정책담당자, 사업자, 시민사회 및 개인 등 디지털경제 행위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관선언문은 OECD 의결기구인 각료이사회에 핵심의제로 보고되고, 향후 OECD의 ICT 분야 논의방향의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세부내용 파악 및 이전 장관선언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방향도 점검해볼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2016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를 주관하는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와 장관회의의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칸쿤장관회의의 주요 결과로 주요 패널 논의내용 및 칸쿤선언문의 세부내용과 핵심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장관회의에 기여한 우리측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측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 II.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개요

### 1.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개요

#### (1) CDEP 개요

OECD의 정보통신 분야 장관회의는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이하 CDEP)<sup>7)</sup>에서 주관한다. CDEP은 1982년 4월 정보통신정책위

7) 2013년 12월 위원회 구조개혁 과정에서 위원회 명칭을 ‘정보통신정책위원회’에서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로 변경

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이하 ICCP)라는 이름으로 OECD 40여개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설립되어, 그간 ICT, 인터넷경제, 디지털경제의 주요 정책 이슈를 선도적으로 논의하고 회원국들에게 미래의 정책방향을 제시 및 가이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8)</sup> CDEP 정례회의는 매년 2회<sup>9)</sup> OECD 본부인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올해 6월까지 72차례 정례회의가 진행되었다.<sup>10)</sup> 동 회의에서 논의되고 채택된 주요 선언문, 권고안, 가이드 등의 문건<sup>11)</sup>은 OECD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되어 회원국들의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고 있다.

CDEP은 현재 의장 1인, 부의장 9인<sup>12)</sup>의 의장단을 구성하고<sup>13)</sup> 사무국과 협의하여 논의 이슈 및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합의체로, 그 산하에 3개 세부작업반<sup>14)</sup>을 두어 세부 전문분야의 의제를 논의하고 쌍방향(상하향식) 소통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즉, 산하작업반의 논의가 CDEP에 보고 및 승인되고, CDEP의 논의는 이사회 및 각료 회의에 보고 및 승인되며, 반대로 각료회의의 중요한 논의 및 결정사항이 위원회 및 작업반에 전달되는 형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OECD 회원국들은 선순환 의제구조의 중심점인 장관회의의 조속한 시일내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8년만에 세 번째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8) OECD(2013), pp.2~5.

9) 1982년 4월 처음 개최된 후 매년 2회씩 개최되었고, 2002년(글로벌포럼준비), 2008년(서울장관회의의 후속), 2016년(칸쿤장관회의의 후속)에만 3회 정례회의 개최. OECD 게시판(OLIS).

10) 72차례 회의중 5번(51차(2006.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52차(2007. 3월, 네덜란드 헤이그), 53차(2007. 10월, 캐나다 오타와), 55차(2008. 6월, 한국 서울), 72차(2016. 6월, 멕시코 칸쿤))을 제외하고 모두 OECD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OECD 게시판(OLIS).

11) CDEP 차원에서 현재까지 채택된 주요문건은 선언문 6건, 권고안 10건 등이며, 동 문건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큼

12) 덴마크(의장), 한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이탈리아(이상 부의장)로 구성(\*임시 부의장(장관회의 개최국, 구IE 작업반 의장) 2인 포함).

13) 매년 하반기 정례회의에서 선출되며, 위원회의 의제 수립 및 논의를 이끌어감. OECD(2016d), pp.4~7.

14)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PCISP), 디지털경제정보보호프라이버시작업반(WPSPDE), 디지털경제측정분석작업반(WPMADE)

## (2) 장관회의 연혁

CDEP(前ICCP) 주관 장관회의는 1998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이하 오타와 장관회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발전 증진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ICCP위원회 주관 고위급 최초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오타와 장관회의는 1990년대 인터넷의 태동 및 확산과 함께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인터넷 상의 거래 문제, 즉, 전자상거래의 주체인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는 권한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확보하는 논의를 확산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개념,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소비자 보호 이슈, 관련 통계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장관회의 결과 소비자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인증에 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sup>15)</sup>

이후 10년 만에 2008년 한국 서울에서 두 번째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sup>16)</sup>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이하 서울장관회의)’는 디지털 시대 융합, 창조, 신뢰를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sup>17)</sup>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결과물로 채택하였다. 서울장관회의는 인터넷의 본질과 기능을 성장의 플랫폼으로 인식하였으며, 정부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인터넷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sup>18)</sup>

2008년 서울장관회의 이후 ICCP위원회는 장관회의 후속조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고위급 차원의 논의를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2011년 ‘인터넷경

15) OECD(1998), pp.4~7.

16) OECD 장관회의는 개최 주기가 처음 2회에는 10년, 3회에는 8년으로 다른 국제기구의 고위급(장관급)회의 개최 주기보다 긴 편임.(ITU 전권회의는 4년,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는 2-3년, ASEAN 정보통신장관회의는 1년) 이에 회원국들은 최근 기술의 변화 및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데 반해 정부의 정책대응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어, 정책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장관회의 개최 주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다수가 공감함. 72차 CDEP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17) 인터넷기반 경제 조성을 위해 필요한 3C(융합(Convergence), 창의(Creativity), 신뢰(Confidence))가 OECD 장관회의 주제로 선정됨.

18) 남상열 외(2008), pp.25~27.

제에 관한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on “The Internet Economy”)를 추진 및 개최하였고, 장관회의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고위급회의의 결과로 인터넷정책 결정원칙 13개 및 권고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2010년대 들어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경제의 효용을 더욱 극대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OECD 회원국들은 혁신 및 포용적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서의 디지털경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관행 및 정책 옵션 정보를 정책담당자에게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2016년 디지털경제에 관한 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특히 OECD 회원국들은 2008년 서울 장관회의 및 2011년 고위급회

<표 1> OECD CDEP위원회 주관 장관회의 연혁

차수	일정/개최지	정식명칭	전체 주제
제1차	1998. 10. 8~10. 9 캐나다 오타와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	국경없는 세계: 전자상거래의 잠재력 실현(Borderless World: Realising the Potential of Electronic Commerce)
제2차	2008. 6. 17~6. 18 한국 서울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인터넷경제의 미래(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2011. 6. 28~29 프랑스 파리	인터넷경제에 관한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on “the Internet Economy)	혁신 및 성장 촉진(Generating Innovation and Growth)
제3차	2016. 6. 22~6. 23 멕시코 칸쿤	디지털경제에 관한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Digital Economy)	디지털경제: 혁신, 성장 및 사회적 번영(Digital Economy: Innovation, Growth and Social Prosperity)

자료: OECD 홈페이지 재정리

의의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장관회의 개최 시기를 앞당겨 빠른 시일내에 장관회의를 준비하여 개최할 것에 공감하였다.<sup>19)</sup>

## 2. 디지털경제장관회의 추진경과<sup>20)</sup>

장관회의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위원회인 CDEP 위원회에서 계획되고 준비되므로 CDEP 위원회의 정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장관회의는 크게 개최국, 개최시기, 전체 주제 등 장관회의 개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준비와 배경문서, 토의문서 등 장관회의 문건 및 장관선언문에 대한 준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2008년 서울장관회의 이후 회원국들은 장관회의를 10년 만에 개최한다는 점이 급속한 기술발전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다. 그러나 고위급 정부인사들이 단시간내에 모여 논의한다는 점에는 명분과 이슈의 적절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과도기적 조치로 2008년 장관회의의 논의 연계를 지속하되 장관급회의라는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장관회의라는 타이틀 대신 고위급회의라는 명칭으로 2011년 인터넷경제 고위급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sup>21)</sup>

동 고위급회의 이후 회원국들은 인터넷경제 나아가 디지털경제의 확산과 이로인한 다양한 정책이슈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세 번째 장관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하였고,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장관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논의를 개시하게 되었다.

CDEP 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64차 정례회의에서 2016년 장관회의 개최를 처음 논의하고, 2013년 6월 65차 정례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2013년 12월 66차 및 2014년 6월 67차 정례회의에서는 개최국, 전체 주제, 일정, 개최준비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였고, 2014년 12월 68차 회의에서 주제를 확정하였다. 개최국 선정과 관련, 멕

19) OECD(2012), pp.3~6. 64차 및 65차 ICCP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20) 64차~72차 CDEP 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21) 60차 ICCP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시코와 러시아가 장관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으나, OECD 회원국, 대륙별 분배를 고려한 남미지역 최초 개최 등이 인정되어 멕시코가 최종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sup>22)</sup> 전체 주제와 관련, 미국, 일본은 ‘디지털경제: 포용적 성장 및 혁신’을 선호하였으나,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이탈리아, 핀란드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디지털 경제: 혁신, 성장 및 사회적 변형’을 적극 선호하여 후자로 결정되었다.<sup>23)</sup>

69차에서 71차 회의까지는 주로 장관회의 문서, 즉 패널세션 주제별 배경문서 및 토의문서와 장관선언문 문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장관회의 논의 초기 4개 테마를 정하고 테마별로 2개씩 총 8개의 패널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패널별로 장관급이 논의할 만한 주제를 위한 논의배경을 담은 8개의 배경문서를 작업하고 패널 토의 주제를 질문 형식으로 담은 8개의 토의문서를 3차례 수정과정을 거쳐 확정하였다.<sup>24)</sup>

장관선언문은 2015년 8월 장관회의 운영그룹(SG) 논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2015년 2월 70차 정례회의에서 1차 수정안 논의, 2016년 1~3월 장관회의 준비 운영그룹 컨퍼런스콜, 드래프팅 회의, 위원회 및 작업반 확대의장단을 통한 2차 수정안 논의, 2016년 3월 71차 정례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논의 및 승인하였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세부 문건에 대한 회원국 입장을 논의 및 수렴하였고, 2016년 5월 최종안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2014년 이사회는 CDEP이 주관하는 장관회의 개최를 결정하였고, 2015년 3월 이사회는 장관회의 개최일, 의장국으로 멕시코, 부의장국으로 캐나다, 한국, 미국 선출, 장관회의 주제, 임시 의제 초안·문서·결과물 등의 세부사항을 확정하였다. 또한 2015년 9월 이사회는 부의장국으로 프랑스와 EU를 추가 선출하고, 비회원국, 국제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회의에 초대하는 것에 동의하였다.<sup>25)</sup>

22) 김성웅(2013), p.5 재인용. 66차 ICCP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23) 68차 CDEP 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24) OECD(2016b)

25) OECD(2016a), p.2.



### Ⅲ.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

디지털경제장관회의는 간쿤선언문이라는 핵심 결과물 이외에 본회의 이틀간의 8개 패널 세션논의, 사전행사인 이해관계자 포럼 논의, 그리고 부대행사인 해커톤, 전시회, 중남미 브로드밴드 톨킷 런칭 이벤트 등 다양한 결과를 남겼다. 특히 패널세션은 병행으로 진행되며 관심주제에 대한 대표단들의 집중도를 높였고, 장관선언문은 디지털경제의 세부 현안이슈를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표 2〉 OECD 장관회의 프로그램 및 결과 비교

차수	프로그램 구조		장관회의 결과		특징 및 비교
	사전회의	본회의	사전회의	본회의	
제1차 오타와	조세 라운드 테이블 컨퍼런스	4개 패널세션	공동 선언문	글로벌 네트워크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선언문,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선언문, 전자상거래 인증에 관한 선언문	사전회의에 정부, 기업 대표만 참여
제2차 서울	이해관계자 포럼	5개 라운드 테이블	비즈니스 포럼 비전성명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	기업, 기술, 시민사회, 노동계로 대표되는 이 해관계자 논의 시도
제3차 칸쿤	이해관계자 포럼	8개 패널세션	-	디지털경제에 관한 칸쿤선언문	이해관계자 결과물 없음 패널세션 세분화/병행

자료: OECD(1998), OECD(2008b), OECD(2016a) 재구성

칸쿤장관회의는 서울장관회의에서 시작한 장관회의 사전회의인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전회의 결과로 오타와 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문(Joint Declaration), 서울장관회의에서 비즈니스분야 비전성명(Vision Statement) 등을 채택한 데 반해, 칸쿤장관회의는 별도의 결과물을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1차, 2차 장관회의 본회의가 4개 패널 또는 5개 라운드테이블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반면, 3차 장관회의

에서는 패널을 8개로 세분화하여 한층 심층적인 논의를 추구하였고, 대신 세션을 2개 트랙으로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논의가 산만해 질 가능성을 예방하였다.

한편 본회의 결과물과 관련, 오타와장관회의는 전자상거래 관련 3가지 분야의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서울 및 칸쿤장관회의는 각각 인터넷경제와 디지털경제의 단일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 1. 주요 패널 논의내용<sup>26)</sup>

디지털경제장관회의는 4개 테마를 기반으로 테마별로 2개씩 패널을 구분하여 전체 8개 패널세션으로 본회의를 구성하였다. 각 패널은 CDEP 위원회, 산하 작업반 또는 다른 위원회 등 담당을 지정해 패널 준비, 사전 논의 및 참가자간 논의 진행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특히 앞서 설명한 OECD의 수평적 작업 및 협력이 반영되었다. 패널별로 CDEP 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심

〈표 3〉 패널세션 분야별 담당 작업반

테마	패널 주제		담당 위원회/작업반
1. 열린 인터넷: 성장과 포용을 위한 플랫폼	1.1	인터넷 개방성의 경제사회적 혜택	CDEP
	1.2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2. 글로벌 연결성 촉진	2.1	융합을 통한 네트워크와 서비스 개선	WPCISP
	2.2	내일의 사물인터넷(IoT)	
3. 데이터 경제의 신뢰	3.1	소비자 신뢰 및 시장 성장	WPSPDE, CCP
	3.2	경제사회적 변형을 위한 디지털 보안 및 위험 관리	WPSPDE
4. 디지털 경제에서의 일자리와 기술	4.1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WPMADP
	4.2	디지털 세계를 위한 기술	

자료: OECD(2014), OECD(2016) 재정리

26) 2016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

도깊은 준비를 함과 동시에 이슈와 관련된 다른 위원회와 수평적으로 연계하여 준비하였다. 예를들어 패널 3.1 소비자 신뢰 및 시장 성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CCP)가 의제를 주도적으로 담당하였고, 패널 2.2 사물인터넷은 CCP에서 소비자 이슈 관련 인풋을 제공하였다.

### (1) 인터넷 개방성

패널 참가자들은 인터넷 개방성의 의미, 중요성 및 인터넷 개방성에 대해 국가 별로 다른 접근방식을 하계하는 정책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였다.

인터넷 개방성은 다수 이해관계자 메커니즘, 국경간 자유로운 정보의 이동 등의 요소로 이뤄져 있으며, 인터넷 속성상 개방되어 공유됨으로서 경제성장 및 혁신에 기여하고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패널논의 참가자들은 혜택을 극대화 하기 위해 인터넷을 개방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뒤야하며 제한하면 잠재력도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결정자들은 디지털경제 혜택 극대화 및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법적,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인터넷 개방성의 영향과 관련, 인터넷은 투명성을 가능하게 하여 혁신, 기업가정신, 기업간 파트너십 등을 촉진한다. 또한 무역 확대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이러한 영향력에 대한 측정 문제는 매우 다루기 어려운 이슈로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등 인터넷 개방성 측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한편, 인터넷 개방성의 잠재력 활용에 대한 모범사례 및 방안으로, 오픈 거버넌스정책, 교육을 통한 역량 구축, 공유경제 모델, 참여 극대화, 데이터 보안을 위한 암호화, 개도국 기술 이동 등이 제시되었고, 정책 규제사례로 망중립성, 온라인 여성폭력,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가 논의 되었다. 그러나, 잠재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 많은 규제 및 제한보다 공정한 접속 및 포용성이 중요함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방성의 기회 및 도전과제를 협력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포용 및 합법성이 부여된 다수 이해관계자 모델이 중요하며, 도전과제가 정부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비즈니스, 시민사회의 도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에 있어 OECD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 (2)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혁신

패널 발표자, 토론자들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개발과 관련 각국의 경험 및 전문 지식 공유를 통해 디지털 혁신에 대해 범정부적인 접근방식을 지원하는 정책 및 관행, 그리고 지역개발, 빈곤문제해결과 같은 정책목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ICT 활용 촉진 및 투자 촉진 방안과 관련하여 패널1.2에서는 인프라, 사용자 기기, 뉴 테크 등에 주목하고, 사회적인 취약계층(underserved)의 ICT 채택 및 활용에 공공 및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며, 디지털 채택을 위한 훈련과 디지털 중소기업의 육성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ICT 투자의 미진은 발전된(advanced) 기술을 가진 인적자원(전문가)의 부족이 원인이므로, 인적자원 개발이 정책적 최우선사항이며, 결국 ICT 교육이 중요함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디지털혁신 관련 계층간 이질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디지털화에 대한 공동의 이해가 우선 전제되어야 하고, 디지털화의 의미 및 법규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디지털화 및 그 방향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디지털화의 의미를 규명하고 지원방법 등을 위한 입법들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조직간의 갭 해결을 위한 디지털 격차해소 문제는 브로드밴드, 연결성을 해결해야 해결 가능하며, 혁신 격차의 확대 문제는 스타트업, 정부, 기업가들에게 도전과제이므로 개도국의 온라인 연결 개선을 위한 글로벌 연결성 이니셔티브, ITU의 커넥트 2020 결의안 등을 적절한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계층간 이질성 해결이 가능하며, 이에 더하여 다수이해관계자간의 대화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혁신클러스터 비교우위 강화 및 민관 이니셔티브 활용방안과 관련, 패널들은 디지털 혁신은 사회나 시장만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 활성화, 클러스터를 통한 혁신 촉진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규제 중립적,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혁신의 선두에 있는 클러스터 지원 등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한편, 스웨덴은 자국 정부의 사례를 들고 혁신, 고용 등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정치 수준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고, 한국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 클러스터와 공공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이를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설명하고,

클러스터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전통적 분야를 변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은 디지털 혁신 펀드 등을 조성하고, 비즈니스 모델, 기술 훈련 등을 전통분야에 제공하는 것이며, 특히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바일 등 분야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기술 채택을 촉진해야 하며, 교육 시스템을 통해 의료 등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화 환경하에서 기존의 규제 정책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례로 K-ICT 전략 등 한국의 ICT 융합정책을 소개하였다. 특히,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도를 향상시키고,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은 SW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중장기적으로 디지털혁신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의 파괴적효과(disruption)에 대한 대응에 대해, 정부는 규제정책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의 파괴적 효과에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하며, 정책결정자들은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3) 융합을 통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향상

융합 세션에서는 글로벌 연결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정책 도구 검토, 네트워크 상에서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인터넷 보존 등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브로드밴드 접속 확대를 위한 정책과 관련,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비용 감소 등이 필요하며, 정부는 사업자에 공정한 환경(level playing field)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물리적 접근성, 합리적 가격, 기술과 역량 등이 강조되었다.

혁신, 경쟁, 투자의 인센티브를 최적화하기 위한 시장 보완 정책과 관련, 사물인터넷 등 혁신 및 변화가 빠른 산업은 시장 예측이 어려우므로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며, 경쟁과 소비자 보호와의 균형을 고려한 규제를 통해 투자 촉진 및 회수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융합 환경 하에서의 규제 검토와 관련, 다수 행위자를 고려한 이해관계자 모델, 정보의 투명성과 소비자에 대한 전달 및 모니터링 등이 지향해야 할 규제 정책이며,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 동향 파악과 함께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차별없이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이익을 위해 규제 접근이 이뤄져야 하며, 개별사례에 따른 접근과 통합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4) 미래의 사물인터넷

패널 참석자들은 정책 입안자가 사물인터넷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사물인터넷의 긍정적인 요소를 촉진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안, 소비자보호 및 경제·사회적 가치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보다 폭넓게 다루는 것 뿐 아니라 효율적이며 광범위한 통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물인터넷의 잠재적 기회에 대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산업 전반에서 비용 절감, 자원활용,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되며, 신흥 경제국과 개도국에 대규모 투자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 즉, 무인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분야가 확대되고, 사물인터넷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최종소비자를 위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관련, 센서의 크기 축소로 인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보안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 앱 및 서비스에서의 신뢰 구축을 위해 암호화 등 기술적인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피드백 및 상호작용, 소비자 측면에서는 교육이 필요함이 강조되었고,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 앱 개발 등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최적의 상호운용성, 정책 및 방안 개발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역할도 상호운용성 및 정책 수립에 있어 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계를 고려하고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방된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관련 결정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되며, 공공과 민간 정보가 잘 공유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 (5)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일자리 이슈와 관련된 패널에서는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성장, 일자리 창출 정책 및 고용 전환과 고용의 질을 보장 및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ICT 투자 및 디지털 활용 촉진을 위한 개별 행위자의 역할과 관련, 개별 이해관계자들은 각자 특수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업가의 자유, 법적 명확성, 지적재산권, 유연한 노동시장, 재정정책 등의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조건 마련 및 최선의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특히 기술이 권력에 의해 이용되지 않고 사회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바, 정부, 기술, 비즈니스 분야 내 협력과 대화의 중요성, 즉 신뢰가 기반이 되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강조되었다.

디지털화로 인한 노동대체 해결 및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과 관련, 훈련과 재훈련을 통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 역량개발(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일자리 감소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노동력을 위해 디지털 도구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공감하였다.

일자리 질, 역량 개발, 노동시장 안정성과 함께 인터넷으로 창출되는 고용 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과 관련, 기술교육의 지속적인 개발,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유연화, IT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과 브로드밴드 접근성 확대, 빠른 변화 속도로 인한 일자리 매칭을 사회적 이익에 따라 관리할 필요성 등 다양한 가능성이 주어진 21세기 기술에 걸맞는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 (6) 디지털 기술

마지막 패널의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확산 및 역량개발의 병행, 국가역량개발

시스템의 대응성 증대, 디지털 기술로 창출되는 학습기회 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디지털 기술(skill)의 보급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역량개발 보장 방법과 관련, 정부는 코딩교육을 정규교육에 포함시키고 기업은 부트캠프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역량강화, 사회는 코딩교육 이행 등 디지털 경제에서 정부, 기업, 사회가 책임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조합도 공동 협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의 인정을 위한 접근방식에 대해 디지털 세계에서 요구되는 역량기술의 파악, 즉 무엇이 교육과 학습에 적절한 기술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학습기회 및 노동기회가 제한된 여성 등 소수자들을 위한 공공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한편 일부 패널은 디지털 기술을 넘어 사회적 역량(social capacity)의 중요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향후 점차 소통과 같은 연성 기술(soft skill)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보급 촉진 방법과 관련, 패널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술을 시의적절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최대 활용이며 디지털 기술 활용이 최대화되면 역량개발이 따를 것으로 보았고, 역량개발과 병행되는 새로운 기술-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의 활용, 노동시장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2. 칸쿤선언문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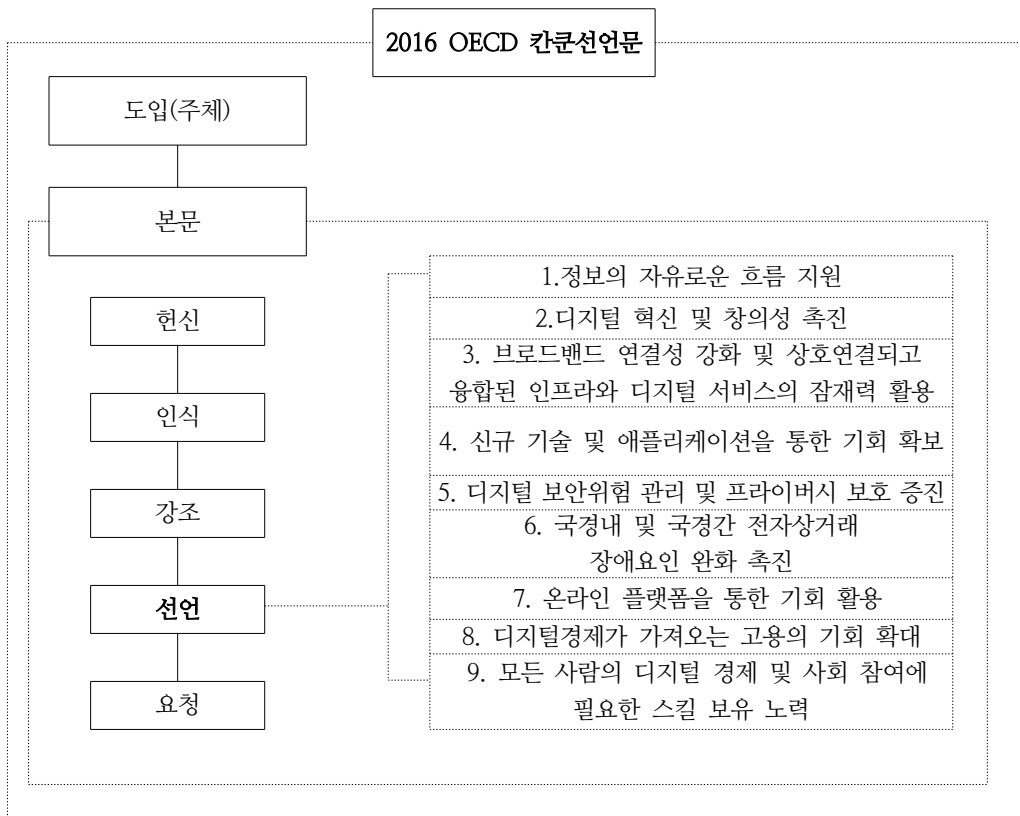
### (1) 구조

칸쿤선언문은 주체를 밝히는 도입 부분과 디지털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 헌신, 인식, 강조, 선언, 요청하는 본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선언문의 핵심 파트인 선언 부분은 9개의 세부사항을 향후 추진 및 이행할 것을 담은 선언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칸쿤선언문은 장관들의 합의사항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선언문 보다 자세



한 내용을 담지는 않았고, 장관회의 실제 패널 논의와의 일관성을 위해 9개 세부사항을 패널세션 주제와 연계시켜 장관회의 이후에도 회원국들이 지속 이행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그림 1] 칸쿤선언문의 구조



자료: OECD(2016a) 칸쿤선언문 재구성

## (2) 세부 내용

칸쿤선언문은 그 처음을 선언문에 합의하는 주체(We), 즉 참가한 (비)회원국 장관 및 대표단을 열거하여 확정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다음은 법의지배와 인권 존중,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 경제사회적 기회 증진을 위해

헌신(Committed)해왔음을 밝히고 있다.

세 번째로 오늘날 디지털경제 사회의 상황, OECD의 비전, 동 선언문 논의 및 완성  
에 근거가 되는 배경 및 문건을 인식(Recognize)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 및 지식  
기반자본 투자 및 활용 증대가 사회를 변혁하고 있고, 디지털경제가 혁신, 성장, 사회  
적 번영에 촉매 역할, 복지 및 기회 균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이 비전  
임을 인식하고, 비전 실현을 위해 디지털경제의 기회 및 과제 해결에 모든 이해관계자  
의 협력이 필요하며, 증거기반 정책을 수반하는 범사회적, 전체적인 접근 채택이 필요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오타와 장관회의와 2008년 서울 장관회의가 다양  
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함으로써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는데 초석이 됨  
을 인식하고, 다양한 권고안<sup>27)</sup> 등이 디지털 경제의 일관된 정책 개발에 초석이 되고  
있으며, NETmundial 다수이해관계자 성명이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 중요하게 기여  
했음을 인식하고 있다.

네 번째로 글로벌 기술표준 개발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및 합의에 기반한 접근,  
글로벌 다수 이해관계자 인터넷 거버넌스의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절차에 대한  
필요성, 디지털경제를 지지하는 동 이니셔티브가 UN 2030 지속가능개발 아젠다 및  
정보사회정상회의 결과 달성에의 기여, 그리고 양성 평등 및 취약계층 포용이 필요함  
을 강조(Underline)하고 있다.

다섯번째, 선언문의 핵심부분인 다음사항을 목표로서 선언(Declare)하고 있다.

- 1)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지원: 인터넷 개방성 강화 정책,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  
호를 위한 프레임워크 존중 및 디지털 보안 강화
- 2) 디지털 혁신 및 창의성 촉진: 지식기반자본과 디지털 기술 투자 촉진, 기업가정  
신 촉진, 중소기업 및 공공부분의 발전 지원
- 3) 브로드밴드 연결성 강화 및 상호연결되고 융합된 인프라와 디지털 서비스의 잠  
재력 활용: 브로드밴드 망 투자, 소비자 보호, 경쟁 촉진, 기술중립적 프레임워

27) 인터넷정책결정에 대한 권고안(2011),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 권고안(2016), 디지털보안위협  
관리에 대한 권고안(2015),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경간흐름관리에 대한 권고안(1980)

크 채택, 디지털격차 해소

- 4) 신규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회 확보: 정책, 규제틀, 글로벌 표준의 적절성 평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제조업의 디지털변혁 등 신규 기술 기회 포착
- 5) 디지털 보안위험 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증진: 신뢰 강화를 위한 협력전략 개발, 일관성있는 디지털 보안과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지원,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촉진
- 6) 국경내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장애요인 완화 촉진: 소비자 신뢰와 상품 안전 강화, 경쟁 촉진, 소비자 중심의 혁신 지원, 소비자 보호, 기타 관계당국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규제틀 채택
- 7)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회 활용: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과 규제틀의 적절성 및 사회·경제적 이익과 도전과제를 평가
- 8) 디지털경제가 가져오는 고용의 기회 확대: 투자장벽 축소, 디지털 기술 적용, 업무의 질과 사회보호망 양성을 위한 노동정책 및 프로그램 채택, 취약계층의 사회비용 완화
- 9) 모든 사람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참여에 필요한 스킬 보유 노력: 디지털 기술에 대응가능한 교육 훈련 시스템의 수용력 향상, 기술능력 향상 및 재훈련 촉진, 디지털 사용능력 촉진

부가적으로 OECD의 지원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으로 상기목표 실현 및 경험 공유에 협력할 것을 선언(Further Declare)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가 디지털경제 관련 업무를 더욱 개발하고, OECD 기술전략 및 고용전략 업데이트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의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청(Invite)하고, OECD가 디지털경제의 번영 및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개발에 요구되는 강력한 증거 및 혁신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Call on)하고 있다.

선언문의 내용 중 핵심내용은 선언부분의 세부항목 9개이다. 9개 세부항목은 8개

패널세션의 주제와 직결되어 있다. 위원회는 장관회의 준비과정에서 4개 테마 8개 패널주제를 설정하였고, 이러한 패널의 주제와 논의가 장관선언문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관회의의 기저에 흐르는 핵심분야가 장관회의 이후에도 위원회 핵심업무로서 지속 추진 및 연구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근거이다.

### (3) 최근 장관회의 결과물과의 비교 및 의의

지난 두 차례의 장관선언문과 칸쿤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이슈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OECD의 정보통신 관련 논의의 흐름 및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오타와선언문이 분야별 3개의 선언문을 채택한 것과 달리 서울선언문과 같이 1개의 단일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선언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오타와 선언문에 비해 내용이 늘어났으나 서울선언문과 비교시에는 구성내용이 간략하다.

반면 이전 장관선언문에 비해 결정사항은 내용이 더 풍부해졌다. 오타와선언문은 5~6개의 결정사항, 서울선언문은 4개의 결정사항이 담겨 있으나, 칸쿤선언문은 9개로 확대하여 디지털경제 지원 조치를 좀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다양화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술, 인프라, 서비스, 정책, 신뢰, 고용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였다. 이해관계자가 확대되고 ICT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 장관회의 이후 후속 논의가 현재 국가들이 중요시하는 분야들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 최근 OECD 장관회의 장관선언문 비교

선언문	오타와선언문			서울선언문	칸쿤선언문
	인증	프라이버시 보호	소비자 보호		
선언 사항 (결정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인증에 비차별적 접근법 채택</li> <li>2. 인증 기술 및 메커니즘 활용 촉진</li> <li>3. ICT, 전자인증 메커니즘 관련 법규, 정책, 요건 수정</li> <li>4. 전자인증 기술 적용</li> <li>5. 이해관계자와 국제협력 지속</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프라이버시 정책의 채택 촉진</li> <li>2.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 이용자에 온라인 공지 촉진</li> <li>3. 효과적인 집행 메커니즘 보장</li> <li>4. 온라인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이용자 교육 및 인식제고 증진</li> <li>5. 프라이버시 개선 기술의 이용 촉진</li> <li>6. 온라인 국경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계약상 해결책 이용 및 발전 촉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상거래 특수 환경 관련 법규, 관행 점검</li> <li>2. 효과적인 시장 주도 자기규제 메커니즘 개발 지원</li> <li>3. 소비자보호 위한 기술 발전 촉진</li> <li>4. 소비자 교육, 기업인식제고</li> <li>5. 국제협력 위한 입법사법 담당자 인식제고</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융합 촉진</li> <li>2. 창의성 증진</li> <li>3. 신뢰성, 보안 강화</li> <li>4. 글로벌 인터넷경제를 위한 정책 보장</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지원</li> <li>2. 디지털 혁신 및 창의성 촉진</li> <li>3. 브로드밴드 연결성 강화 및 상호연결되고 융합된 인프라와 디지털 서비스의 잠재력 활용</li> <li>4. 신규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회 확보</li> <li>5. 디지털 보안위험 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증진</li> <li>6. 국경내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장애요인 완화 촉진</li> <li>7.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회 활용</li> <li>8. 디지털경제가 가져오는 고용의 기회 확대</li> <li>9. 모든 사람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참여에 필요한 스킬 보유 노력</li> </ol>

자료: OECD(1998), OECD(2008), OECD(2016a) 재정리

앞서 설명했듯이 장관회의 논의내용 및 결과는 향후 국제기구의 업무방향 및 정책 대응의 흐름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OECD처럼 장관회의 개최 주기가 긴 경우, 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의존성 및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998년 오타와 장관회의는 선언문에서 향후 2년 이내에 선언문 목표 추진정도를 점검할 것을 동의하였다. 동 장관회의 이후에는, 장관회의의 액션플랜에 따라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경제사회적 영향 측정 및 분석, 글로벌 전자상거래 진전을 위한 국제 논의 등이 확대되었으며,<sup>28)</sup> 그 결과 1999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2003년 ‘국경간 상거래의 사기 및 기망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 2007년 ‘전자인증에 관한 OECD 권고 및 전자인증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등이 채택되었다.

2008년 서울장관회의는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3년간의 후속이행조치를 선언문에서 담고있어 핵심분야별로 후속 연구 및 분석 작업을 추진하였다.<sup>29)</sup> 서울선언문이 규정한 7개 주제분야<sup>30)</sup>를 검토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외적 발전 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가능한 연구분야를 제시하여 서울선언문의 권고사항 이행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중요정보인프라 보호정책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2008년 ‘공공분야 정보의 접근확대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이사회 권고안’, 2010년 ‘ICT와 환경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2012년 ‘국제모바일로밍 이사회 권고안’ 등이 채택되었다.

2016년 칸쿤장관회의는 선언문에서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전 장관회의의 후속조치처럼 어느정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CDEP 위원회는 이미 향후 2년간의 업무프로그램 및 예산을 담은 2017~2018 PWB에서 칸쿤장관회의 이후 동 위원회의 업무 및 연구 방향을 중요도에 따라 설정해놓았다. 2017~18 PWB를 살펴보면 선언문의 9개 결정사항이 PWB 세부 산출물결과 즉 업무프로그램의 내용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경제를 위한 기반 강화’, ‘성장과 복지를 위한 디지털화의 효용 추구’를 향후 핵심 업무분야로 설정하고,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증거기반 강화, 신뢰 개선, 디지털화의 혜택 및 과제 이해, 기술 및 고용 성장 촉진 등 세부 산출물에 주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산출물결과 즉 프로젝트

28) OECD(1998). pp.7~12. 한국전산원(1998), pp.13~48.

29) OECD(2010)

30) 1) 인터넷 경제의 토대 마련: 초고속 인프라 통한 인터넷 접근, 2) 데이터가 견인하는 경제의 이해: 스마트 인터넷 경제의 발전, 3)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성 혁신: 인터넷 경제의 혁신에 대한 주요 분야 검토, 4) 사이버보안 및 프라이버시, 5) 소비자 보호 및 권한 부여, 6) 발전을 위한 인터넷 경제로의 글로벌 참여 보장, 7) 개방형 인터넷 경제 보장. 김성웅(2013), p.9.

트의 내용에 선언문 결정사항이 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표 5〉 OECD 장관회의 결과와 후속 업무프로그램 비교

패널세션	칸쿤선언문	2017~18 PWB
1.1 인터넷 개방성의 경제 사회적 혜택	1.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지원	1.2 디지털경제를 위한 증거기반 강화(개방성 평가, 데이터흐름 접근)
1.2 경제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2. 디지털 혁신 및 창의성 촉진	1.5 디지털 전략 및 정책의 효과 측정
2.1 융합을 통한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개선	3. 브로드밴드 연결성 강화 및 상호연결되고 융합된 인프라와 디지털 서비스의 잠재력 활용	1.1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2.1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혜택 및 과제 이해
2.2 미래의 사물인터넷	4. 신규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기회 확보	1.4 사물인터넷 및 기타 신규 기술의 잠재력 발휘
3.2 경제사회적 번영을 위한 디지털 보안 및 위험 관리	5. 디지털 보안위험 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증진	1.3 신뢰 개선(프라이버시전략 개발, 디지털보안위험 관리)
3.1 소비자 신뢰 및 시장 성장	6. 국경내 및 국경간 전자상거래 장애 요인 완화 촉진	2.3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국경간 도전과제
	7.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회 활용	
4.1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8. 디지털경제가 가져오는 고용의 기회 확대	2.2 디지털화된 경제의 기술 및 고용 성장 촉진
4.2 디지털 세상을 위한 기술	9. 모든 사람의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참여에 필요한 스킬 보유 노력	

자료: OECD(2016a), OECD(2016b) 재정리

또한, 칸쿤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장관회의 세션논의와 장관선언문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표 5〉에서처럼 8개 본회의 패널세션의 주제는 칸쿤선언문의 9개 결정사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8개 패널세션 중 7개 패널세션 주제가 칸쿤선언문의 7개 결정사항과 내용을 같이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를 다룬 1개 패널은 선언문의 2개 결정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다시말해, 8개 패널 세션의 주제들이 칸쿤선언문의 9개 결정사항과 연계되며, 또한 동 결정사항들은 2017~18 PWB의 업무계획 즉 예상산출물과 연계시킴으로써 장관 회의의 결과가 CDEP 차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 한국의 정책 성과

#### (1) 칸쿤선언문에의 기여

우리측은 칸쿤선언문의 초안 작업 및 결정사항 논의 과정에서, CDEP 부의장, 장관 회의 운영그룹 일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선언문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선언문 결정사항이 2011년 인터넷정책결정원칙(IPP)의 11번 원칙(창의성과 혁신 촉진) 및 2008 서울선언문의 선언사항 b항(창의성 증진)과 궤를 같이하므로, 그 맥락을 강조하고 지속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칸쿤선언문 선언사항에 ‘창의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강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선언문 최종본에는 선언사항 2번(디지털 혁신 및 창의성 촉진)에 창의성(creativity)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었다.<sup>31)</sup>

#### (2) 부의장국 역할 수행 및 정책 홍보

패널 발표 및 좌장 수행, 이전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멕시코에 장관회의 준비사항 지원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인 장관회의 개최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측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 미래부 장관은 패널세션 1.2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세션에 참석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창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소개하고, 기존 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OECD 회원국에게 혁신의 동력으로서 창조경제를 전파하였다. 또한 패널세션 2.2 ‘미래의 사물인터넷’ 세션의 좌장으로서, 우리나라가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하는 사물인터넷(IoT)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논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사물인터넷 육성정책을 적극 소개하였다.<sup>32)</sup>

31) 2015. 12월 70차 정례회의 이전까지 선언사항 2번은 ‘디지털 혁신 촉진’이었음

32) 미래부 보도자료(2016a), 2016 디지털경제장관회의의 결과.



### (3) 디지털경제 관련 제안

미래부는 장관회의에서 디지털경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OECD의 강화된 역할을 주문하고,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인재들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 및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디지털경제 확산 촉진을 제안하였다.<sup>33)</sup> 또한 우리측은 디지털경제의 사회경제에의 영향이 매우 큰점을 고려하여, 혜택 극대화 및 과제 최소화를 위해 디지털경제의 영향 및 효과를 측정할 것을 OECD에 제안하였고, 참가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sup>34)</sup> 사실 측정 이슈는 CDEP 위원회의 최근 핵심적인 도전과제이자 다른 국제기구에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는 OECD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PWB에도 증거기반 강화로서 디지털경제, 개방성 등의 영향 및 효과 측정이 업무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장관회의의 성공적 지원 및 장관선언문에의 기여는 OECD 내 협력 및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IV. 결 론

본 고에서는 2016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의 결과를 중심으로 장관회의의 추진경과, 주요 패널 논의결과 및 장관선언문을 검토, 그 의의를 찾고 한국의 정책적 성과를 점검하였다. 35년의 CDEP 위원회 역사상 세 번째 개최되는 장관회의인 만큼 장관선언문에서 OECD 회원국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최대한 세부적이면서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본회의의 패널과의 연계를 통해 선언문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향후 위원회 업무방향인 PWB에 선언문 결정사항을 빠짐없이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장관회의 이후 후속 업무 및 조치의 방향이 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장관회의의 과정과 선언문 문안 작업에 기여함으로써 장관회의의 부의장국, CDEP 위원회 부의장국 및 최다 의장단 진출국이라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향후 의

33) 미래부(2016b) 참고.

34) 72차 정례회의에서 장관회의의 결과와 관련 회원국들은 측정 이슈에 대한 강조에 공감함

제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칸쿤선언문의 내용을 주목하고, 향후 위원회 및 작업반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장관회의 후속 이행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장관선언문은 위원회와 작업반의 향후 업무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다. 따라서 선언문의 세부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 분석하고 CDEP 위원회의 후속 이행작업을 선도해야 한다. 2008년 서울 장관회의 당시 서울선언문 성안작업에 우리측 정책적 관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위원회의 후속 이행조치를 주도할 수 있었다. 이번 칸쿤장관회의 이후에도 사물인터넷, 브로드밴드 인프라, 디지털혁신, 고용 창출 등 우리의 관심이슈를 위원회 내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의제설정과 보고서 산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CDEP 의장단 활동 확대 및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국제기구 논의의 핵심 결과는 의제를 주도하는 의장단, 운영그룹 등 소수의 논의체에서 주로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장관회의도 장관회의 전반의 준비는 운영그룹, 장관선언문은 드래프팅 그룹 및 의장단에서 계획, 진행, 완료 등의 과정하에 주도되었다. 따라서 우리측은 CDEP내 의장단 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위원회 및 산하작업반 총 4개 의장단에 모두 부의장으로 진출해 있어<sup>35)</sup> 회원국 중 최대 의장단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회의 주제, 의제 설정 등 권한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영향력이 큰 의장직으로의 진출도 기구내 분위기 및 시기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국제기구 이슈와 수평적 연계가 요구된다. OECD는 선진경제권의 모임인 만큼 기구내 이슈 논의가 ITU, APEC 등 다른 국제기구에 비해 다소 그 시작이 빠른 편이다. 따라서 OECD 내 논의를 활용하여 우리가 지역적, ICT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기구 이슈에서 수평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역내 논의를 선도하고, 또한 이를 위한 역량도 배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PEC은 작년 정보통신장관회의

35)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TISP(현CISP) 작업반 부의장에 처음 진출 이후,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 및 모든 작업반에 부의장직을 보유하고 있음.

를 통해 인터넷경제임시조정그룹(AHSGIE)을 발족하여 인터넷경제 관련 이슈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G20의 경우 디지털경제태스크포스(DETF)를 구성하여 디지털 혁신 이니셔티브를 도출하는 등 OECD 이슈와 포괄적, 수평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논의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특히, 최근 OECD의 비회원국에 대한 대응방향이 가입 유도 등 외연확대에 치중되고 있는 바 OECD의 개도국 관련 논의는 개도국이 회원국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ASEAN, APEC, APT 등과의 관련성이 깊어지므로 ODA 및 협력 강화 측면에서 OECD 및 다른 국제기구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향후 5년 내지 10년간 이번 장관회의 결과가 OECD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디지털경제 이슈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의 발전 환경을 고려할 때, 디지털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과제를 남겨두게 될지 현재로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OECD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ICT 선도국가로서 우리는 이번 장관회의 결과에 주목하여 향후 디지털경제 동향을 예측하고, 정책방향을 적절히 이끌어, 국민경제 및 사회에 긍정적인 촉매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웅 (2013), “OECD 서울선언문 후속이행작업 검토 및 2016 장관회의 로드맵에 의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5권 23호, 2013. 12.
- 남상열 외 (2008),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08-07, 2008. 12.
- 정은희 (2008), “OECD 장관회의를 통해 바라본 인터넷 경제의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0권 15호, 2008. 8.
- 한국전산원 (1998), “OECD 오타와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정보화정책 이슈 98-14, 1998. 12.

미래창조과학부 (2016a), ‘미래부 장관, 8년만에 열리는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 전파’, 보도자료, 2016. 6. 21일자.

\_\_\_\_\_ (2016b),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OECD 장관회의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디지털경제 발전 방안을 전파하다!’, 미래부 정책뉴스, 2016. 6. 27일자.

60차~66차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67차~72차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2016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

CISCO (2016).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Complete Forecast for 2015 to 2020, 2016. 6.

EL ECONOMISAT (2016). ‘Ministros y la OCDE buscan impulsar el e-commerce global’, 2016. 6. 24.

ITU (2015). “The State of Broadband 2015”, Broadband commission, 2015. 9.

OECD (1998). “OECD Ministerial Conference “A Borderless World: Realising the Potential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Conference Conclusions”, SG/EC(98)14/FINAL. 1998. 12.

\_\_\_\_\_ (2008a), “The Seoul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DSTI/ICCP(2007)16/FINAL, 2008. 8.

\_\_\_\_\_ (2008b), “Programme for the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DSTI/ICCP(2007)24/REV1, 2008. 3.

\_\_\_\_\_ (2010), “Preliminary discussion of 2011~2012 ICCP Work Programme”, DSTI/ICCP(2009)13, 2009. 10.

\_\_\_\_\_ (2012), “ICCP ROADMAP: 2013~2016”, DSTI/ICCP(2012)15, 2012. 10.

\_\_\_\_\_ (2013), “Proposed Revisions to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ICCP Committee and its Working Parties”, DSTI/ICCP(2013)17/ANN, 2013. 12.

\_\_\_\_\_ (2014), “2016 CDEP-Organized Ministerial on the Digital Economy”,

DSTI/ICCP(2014)18, 2014. 11.

OECD (2015),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OECD Publishing.

\_\_\_\_\_ (2016a), “Final Update on the Preparations for the Ministerial Meeting Organised by the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2016)69, 2016. 5.

\_\_\_\_\_ (2016b), “2016 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Digital Economy Draft Discussion Paper”, 2016. 6.

\_\_\_\_\_ (2016c), “Draft programme of Work and Budget 2017–18 for the 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DSTI/ICCP(2016)2/REV2, 2016. 6.

\_\_\_\_\_ (2016d), “Guidelines for the Bureau’s Designation and Working Methods of the CDEP and its Working Parties”, DSTI/ICCP(2016)4, 2016. 5.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홈페이지 (<http://www.oecd.org/internet/ministerial/>)  
(<https://www.gob.mx/economiadigital>)

OECD 게시판(OLIS) ([www.oecd.int/](http://www.oecd.int/))